

	보 도 자 료	
배 포 일 시	2016. 1. 15 / 총 17매	
보 도 일 시	2016. 1. 18(월) 10:00 부터	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창조경제,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.

- 미래부 등 6개 부처, 「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」 업무보고 -

◆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

-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·중소기업 상호 윈-윈 모델 확산
-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,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

◆ 금융·방송통신·바이오헬스·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

- ① ICT, 문화,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
-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,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
-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,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
- ④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

- 미래창조과학부, 문체부, 금융위, 산업부, 복지부, 방통위 6개 부처는 1.18(월) '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'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
-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하여,
 -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'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'과 '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' 정책방안을 마련하고,
 -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금융·방송통신·바이오헬스·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·신서비스 창출, 규제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였음
- 이번 보고된 업무계획은 정책간담회,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

I. 성장동력 기반 확충 (창조경제+문화융성)

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(미래창조과학부)

"대기업의 참여유인 확보 등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"

"창업 초기환경 개선에 비해, 창업 이후 성장·재도전 여건은 아직 아쉬움"

"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"

-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·중소 상생협력 모델 확산,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외 투자·네트워크 확대로 성공사례(유니콘 기업) 창출
- 창업비용 최소화, 기술창업 확대 등으로 쉽고 질 높은 창업(Start-up)을 활성화하고, 더 큰 성장(Scale-up)으로 이어지는 기반* 확충
 - * 자금(크라우드 펀딩) + 기술(중기R&D 지원) + 인력(장기근속 지원) + 홍보(공영홍소폰) 등
- 창조경제·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·상암에 창업·문화콘텐츠 인프라 확충 및 허브구조로 글로벌 진출 고도화
 - 우수벤처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('16.하)

②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(문화체육관광부)

"콘텐츠 해외유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. 해외에 판매할 때 어려움이"

"이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예술인들로 인해 생각들이 다소 말랑말랑해진다"

- 창조경제 플랫폼과 결합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,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견인
 -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사업화, 게임·웹툰 등 첨단 콘텐츠 집중 육성
-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,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유도
 - 상품 개발·유통 등에 디자인·한류 등을 접목, 기업 등에 예술인 파견

II.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

①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(금융위원회)

"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"

"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. 이제 핀테크 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는 등 핀테크 기업과 소통해야"

- 클라우드펀딩,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,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공급

- 해외진출지원, 세계최초의 표준화된 개발도구 제공, 빅데이터 활성화 등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지원
- 인터넷전문은행 출범,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, 만능통장(ISA),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기여

2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(방송통신위원회)

“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,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”

- UHD 방송시장,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, 공동제작·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, 빅데이터·클라우드·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활력제고 추진
-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기에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, 광고·협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,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자유성을 제고

3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(보건복지부)

“국가 차원의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해야”
“원격의료는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”

- 외국인환자 유치 성장(40만명),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(155개) 및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
-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,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
-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, 정밀·재생의료산업 활성화,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통해 제약·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

4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(산업자원부)

“ICT 융복합 제품은 핵심부품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조기 시제품 출시에 주력 필요”

“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위해 과감한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”

- 신속인증제 확대, 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조기 창출 지원
 - 新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신산업 확산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
- 조선, 철강,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,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

[행사 개요]

- 미래창조과학부(이하 ‘미래부’, 장관 : 최양희),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‘문체부’, 장관 : 김종덕),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‘산업부’, 장관 : 주형환), 보건복지부(이하 ‘복지부’, 장관 : 정진엽)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‘방통위’, 위원장 : 최성준), 금융위원회(이하 ‘금융위’, 위원장 : 임종룡) 6개 기관은 1월 18일(월) ‘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’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

[보고 주요내용]

1 성장동력 기반 조성 [창조경제+문화융성]

- ◇ 대기업-중소기업 상호 윈-윈 모델 확산(상생모델, 지역전략산업, 고용존)
- ◇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 / 문화콘텐츠 허브 구축
- ◇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(‘15년 433개 → ‘16년 570개)
- ◇ 혁신센터,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중소·벤처 유통 및 홍보 지원
- ◇ 창업, 산학협력, 전공역량강화 중심의 ‘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’ 추진
- ◇ 융합신산업 성장 등 K-ICT 성과가시화, 문화ICT 융합 선도, 지능정보기술 확보
- ◇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,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
- ◇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한 융·복합 콘텐츠 25개 제작·사업화
- ◇ 방송영상기업-수출기업 동반진출 특별 전담팀 운영
- ◇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,000명 파견

(1)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[미래창조과학부]

- 1 모든 참여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
 -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호 윈-윈 모델*을 확산시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
 - * 예)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가진 KPT와 구슬 화장품 공동개발
 -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, 규제프리존(166, 특별법 제정)을 활용한 시범·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

②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

-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'고용존' 구축을 마무리('16년 1분기)하여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수행
- 일자리 -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,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,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

③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·교류 촉진

-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·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,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글로벌 진출·교류 고도화
-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, 유통·소비·체험 인프라 구축
 - 한류행사 등과 연계, 우수벤처·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('16.하)

④ 쉽고 질 높은 창업 지원

-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, 기술창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
-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자('15년 5천 → '16년 6천명)와 공공 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(연구소기업 등 '15년 433개 → '16년 570개)

⑤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

- 자금, 기술, 인력 등 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수적 자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* (자금)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투자 활성화, (기술) 수출중심 중소기업 R&D지원 (인력)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근속 지원 등
- 벤처·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·유통 지원을 위해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 및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유통 플랫폼 강화

⑥ 도전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

-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(3년간) 및 상장제도 합리화 등으로 M&A, IPO 활성화
-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 보증을 전면 면제(신보, 기보), 재도전지원센터 확대('15.3 → '16.7개소)

⑦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

- 과학기술원 혁신전략*('15.12)을 타 대학에 전파·확산하고 창업, 산학 협력, 전공역량강화 중심으로 "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" 추진
 - 창업 중심 학사제도 도입(K-school),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 등
- 초·중·고·대학의 SW 교육강화*,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 (Security-GYM) 구축,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을 통한 선도인재 육성
 - * 초·중·고 SW교육 선도학교('15년 160개 → '16년 900개) 및 SW중심대학('15년 8개 → '16년 13개) 확대

⑧ R&D 혁신 가속화로 성장기반 마련

- 정부·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난·안전 등 민간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 R&D역량을 집중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
 - 최대 10년간 기초연구 지원, 평가·보고서 등 각종 행정부담 완화
- 기후변화, 바이오, 거대과학(우주·원자력) 등 미래 유망분야의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민간·공공 협동으로 R&D·사업화 등 추진

⑨ ICT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

-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이 가속화*되고 평창, 서울 도심 등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K-ICT 전략('15.3) 추진 성과 가시화
 - * ('15년→'16년 전망) IoT 4.8조원→6.2조원, 클라우드 0.7조원→1.1조원, 빅데이터 2,623억원→3,410억원
- 문화-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(차세대 게임, ScreenX, 테마파크)와 SW융합 프로젝트(조선·해양, 의료) 등 ICT 융합을 확산
- 지능정보기술로 ICT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범정부·사회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

(2)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 [문화체육관광부]

① 경제 재도약의 성장엔진,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

- 범부처·글로벌 프로그램·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
 - * ▲ 문화창조융합벨트 제작 콘텐츠를 상암 문화 ICT·융합 상설관에 시연·구현 (미래부), ▲ K-Culture Valley(경기도/CJ), K-Experience(대한항공)을 통해 콘텐츠 소비·구현 거점 마련

- 지역의 자생적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, 전국 120개 문화·ICT 인프라를 연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 확산

< 지역 문화콘텐츠 인프라 현황('16년 1월 현재) >

콘텐츠 코리아랩	창조경제 혁신센터	지역 스토어	음악 창작소	영상 미디어센터	작은 영화관	글로벌 게임센터	지역콘텐츠산업 유관기관
7개소	18개소	10개소	5개소	38개소 (87개소)	16개소 (27개소)	4개소	18개소

2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성과 창출

- cel 비즈센터 중심 원스톱 사업화와 분기별 성과 추적 등 성과 창출 시스템을 가동하여 93개 입주기업의 고속 성장 지원
- 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인재 매칭프로그램을 연계하고, 청년희망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 대해 창업·인큐베이팅 지원 등 청년희망펀드와의 연계 강화
- 융·복합콘텐츠 창작프로젝트(100억),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콘텐츠 제작(80억)을 통해 대표적 융·복합 콘텐츠 25개 제작·사업화

3 게임·웹툰·영화·애니메이션 등 첨단 콘텐츠 육성

- 가상현실(VR)·증강현실(AR) 등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공간, 중소·창업업체 입주 공간 제공(190억)
- 고화질 특수효과 작업용 첨단인프라(공공 렌더팜)를 구축(40억원, 190대) 등 첨단기술 융합 영화·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 구축

4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

- 한국상품 역직구몰인 K-Mall 24에 우수문화상품·한류 상품을 입점(6월)시키는 등 국내·외 유통 플랫폼* 등과 연계 확대
- * 글로벌 연계(디즈니, 아마존 등),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유통망 활용
- 우리 콘텐츠가 상설 전시·판매될 수 있도록 재외문화원(10개소), 코리아 센터(2개소), 중국 충칭 플래그십 스토어(12월 개관) 등 전략적 거점 마련

5 융복합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전인

- 문화예술·카지노·쇼핑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 휴양문화 확산
- 2개소 내외 신규 사업자 선정('16.2월), LOCZ 복합리조트 착공('16.3월)

-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K-Style Hub*(3월 개관)를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,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집중 발굴·지원(2년간 100억)

* K-Style Hub : 멀티미디어·K-Product 쇼핑 등 아트마켓관, 한식체험 등 체험관, 전통문화 전시 등 전시관 등 3개관으로 구성(구 한국관광공사 건물)

6 산업에 문화를 더해 부가가치 창출

- 제조업 등과 디자인·캐릭터·스토리텔링 접목 지원 체계 마련, 식당·숙박업 등 해외진출 서비스산업의 한국적 공간 디자인 지원
-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·홍대 등지에서 쇼핑·관광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(7월)
- '엠넷 뮤직 어워드(MAMA)', '케이콘(KCON)' 등 민간 한류 행사에 콘텐츠·중소기업제품·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 운영

7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 선도

-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,000명을 파견하는 등 경영전략·상품 기획·마케팅·조직문화 개선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
- 산업단지·테크노파크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(25개 시설, 39개 프로그램), 문화가 있는 날에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는 공연 지원(30개 기업)
-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('15년 10억→'16년 20억)하여 제2, 제3의 조성진이 나올 수 있는 기반 마련

2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

- ◇ 핵심성장분야에 '16년 대출, 투자 등을 통해 정책자금 80조원 공급
- 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시행(3월), 자문업 활성화
- ◇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(10월)
- ◇ 개인정보 비식별화·익명화 조치 신설,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
- ◇ 의료 해외진출법 성과 구현,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목표 달성
- ◇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진입
- ◇ 규제프리존 도입을 계기로 파악된 50개 규제 해제(1분기)
- ◇ 에너지 공기업 투자(5.9조원), 공공기관·기업 등 신산업 수요창출 시범 프로젝트
- ◇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(전기사업법)

[1]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 [금융위원회]

① 창조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공급기능 강화

- 클라우드펀딩 시행(1.25), 투자방식의 기술금융*, 거래소개혁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창조경제 지원 기능 강화

*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 기반 마련 및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,500억원 규모로 운영

- 「기업 투자정보 마당(1.20일, 개설)」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
- 정책금융기관 등이 ICT, 문화콘텐츠, 고부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 성장분야에 80조원을 공급
-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여 자율·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변화와 혁신 촉진

②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

-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세계 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(API)를 제공하여 핀테크 성장 기반 마련
- 해외 데모데이 개최 : 영국(4월), 중국(6월), 미국(10월) 등
-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
- 인터넷전문은행 출범('16.하), 22년만의 보험산업 규제개혁, 글로벌 투자은행(IB)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

③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의 확산

- 온라인·모바일 실명확인 확대, 보험다모아 개선,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·서비스를 국민 생활에 안착
- 절세 만능통장(ISA) 출시(3월),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,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

[2]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[방송통신위원회]

① UHD 방송으로 차세대 방송산업 선도

-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하여 '17.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
- '17.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하여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계획임
- 한편, '16년 511억원 등 12년간 6.8조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지속 점진·독려 추진

②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산업 활성화

- OTT,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
-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
- 창작자 발굴 공모, 포털·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,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,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

③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 확산

-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꿈나무,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한 1인 창작자·미디어벤처, 드라마·다큐·PD스쿨을 통한 PD 지망생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
- 또한,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
- FTA 후속으로 중국·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 체결,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

④ 개인·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

- 빅데이터·사물인터넷·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**비식별화·익명화 조치, 先활용·後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(opt-out) 등을 법제화**
- 또한, 온라인 맞춤형 광고·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**개인정보 보호·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**을 마련
-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, 맞춤형 컨설팅, 특허출원 등 **창업 지원**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, 간이 신고제 도입 등 **규제 개선**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해소

⑤ 기반고도화, 규제개선 등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 창출 지원

-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**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%로 확대하고, 140MHz폭의 LTE 주파수 경매(4월)와 더불어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,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** 등을 추진
- 한편,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**협찬고지·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·협찬규제를 완화**하고,
- 케이블, 위성,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제거하여 **유료 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**

⑥ 시장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예의 엄정 대처

- **동의의결제도, 자율준수 프로그램** 등을 도입하여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**조사·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**
- 또한, 가입·이용·해지 등 **단계별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**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알뜰폰 활성화 등 **통신시장의 경쟁촉진**
- 한편, 상생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, 홈쇼핑사와 납품업체,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등 **시장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처**

[3]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(보건복지부)

①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

-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**종합계획을 마련**하고, **환자 종합 지원 창구 운영**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, **의료 통역 검정제도를 구축**하는 등 **시장을 투명하게 관리**
-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여, **의료 시스템·계약·의료IT 등 패키지 진출(중동) 및 중국, 중남미, 러시아에 적합한 맞춤형 특화전략 추진**
-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**중남미,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**을 추진하고, **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건강관리 등 진출 국가 확대**를 위한 사업 추진

②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 창출

- **취약지역***을 중심으로 **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**하고,
* 도서벽지(11→20개소), 농어촌(30→70개소), 군부대(40→63개소), 원양선박(6→20척), 교정시설(30→32개소)
- **중소기업 근로자, 만성질환자, 농촌창조마을(10개소) 거주 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**하여 **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**
- 또한, **의료용어·서식 등 표준화 및 지역간 의료정보교류*** 확대·실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**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환자의 불편을 해소**
* '15년 시범사업은 지역내 정보교류에 한정

③ 제약·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

- **글로벌 헬스케어펀드(1,500억원) 투자,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시험 센터 건립 등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**
- **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적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, 공익목적의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 의약품 개발 지원**

- **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R&D를 집중**(복지부 397억원, 미래부 505억원 등)하고, **암·만성질환** 등에 대한 **맞춤치료 연구**(관계부처 총 360억원 투자 예정)를 지원하며, **바이오뱅크** 구축으로 연구기반 강화
-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**질병예방 유전자 검사**를 **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**할 수 있도록 허용
- **첨단·고부가가치 의료기기**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**인허가 절차를 간소화**하고, **R&D 지원**(관계부처 총 1,162억원 투자 예정)과 **맞춤형 멘토링** 강화
-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 가속화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**“바이오헬스산업 민·관협의체”**를 구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

[4]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[산업통상자원부]

① 민간의 유망 투자방향 및 부문별 지원시책

(지난 3년간 정부가 19대 신성장동력 등 정부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, 민간은 다음과 같은 투자계획을 표명)

경제 4단체 조사결과('16.1월) 65개 기업이 5대 신산업 분야에 **18년까지 12.2조원** 투자 계획

* ICT융합 : 1.9조원 바이오·헬스 : 1.8조원 신소재부품 : 2.1조원 에너지신산업 : 6.4조원

①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

- **(ICT 융복합)**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,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, 시험환경 확충
 -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,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
 -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규제개선,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
- **(에너지 신산업)** ESS는 송배전, 발전용 등 신규수요 창출 및 기술 개발,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,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초점

- **(바이오, 신소재, 소비재)** 바이오헬스는 초기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수요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
 -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(탄소섬유), 시험인증기반 구축(타이타늄)으로 초기단계 시장확보
 - 고급 소비재는 전문학과 확충(화장품), 수출전문단지 구축(식료품), 현지진출거점 구축(생활유아용품)

②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

- **(조선·철강·석유화학)** 민관공동의 사업전망 및 적정설비 전망을 토대로 적극적·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도개선
 - 이를 위해, 관련 법령 조기제정과 민관합동협의체 지원체계를 구축
 - 석유화학·철강 보고서 마련(산업구조조정 협의체, '16 상반기)
 - * 일본은 수급전망, 적정 설비규모, 대응방향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
- **(반도체·디스플레이)**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
- **(플랜트·원전·방산)** 미래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의 선제적 개발 (저탄소 고효율 발전), 수은, EDCF,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한 수출금융 지원

② 정부의 전폭적 지원 내용

(위와 같은 부문별 지원시책외에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총력적인 정부지원으로 민간투자 지원 시스템 마련)

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

-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적인 규제완화
-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
 - * 규제프리존 계기로 발굴된 79개 규제중 50개는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('16.1분기)
- “규제프리존 지정·운영에 관한 특별법” 제정

- 산업부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폐지
 - * 프로슈머(생산자=소비자) 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이웃에게 판매 가능
 - * 기대효과: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,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
 - * 1MW 이상 대규모 ESS 생산 전력도 전력시장에 판매 허용
 - * 기대효과: 공장, 빌딩, 상가 등 대형 ESS 시장 창출
 - *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신규 창출
-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 및 표준 마련
 - R&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
 - *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('16. 300억원)
 -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·인증 부담 해소
 - * 유사중복 인증 72개 폐지 ('16년)

② 금융·세제 등 정부역량을 총력 지원

R&D 지원 (2.8조원)

- 대대적인 R&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 전폭 지원('16, 2.8조원)
- 서비스·문화·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촉진
 - * 산업부-문체부간 융합R&D 협력MOU 체결(3월)
- 원천기술,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방식 대전환
 - * 출연연 PBS 축소, 기술혁신형 M&A 촉진펀드 조성 등

금융/세제, 인력, 판로 (13.4조원)

- (금융) 신산업 투자에 대한 7.5조원 금융지원
 - * (산업은행)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원 우선 공급, (기업은행) 1조원 우선 공급, (산업부·중기청) 펀드 2.5조원 지원, (한전)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 1조원
- (세제)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유망 품목의 부품·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
-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 연장(' 15.12 → ' 16.6)
-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&D투자 세액공제 지원(71개)
- (인력)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추진
 - * 5대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 정원확대 추진(교육부 협의)
- 신산업 NCS(국가직무표준) 개발 등 추진
- (판로)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 지원
 - *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 '16. 5.9조원,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' 15. 214 → '16. 440)
- (스마트공장) 중소·중견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공장 구축(7개)
-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확산 촉진
 - * 예산 : ('15) 582억원 → ('16) 783억원, 지원전문가 : ('15) 30명 → ('16) 180명

③ 신산업 투자에로 상시해결 시스템 구축

- 산업부에 「신산업 투자지원단」을 설치하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
 - * 애로사항 검토, 관계부처 협의, 처리결과 무투회의 상정

[토론 주요내용]

- 업무보고에 이어 '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 방안(중소기업청)'과 '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가시화 방안(문화체육관광부)'이라는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음
- 토론회에서는 제조업·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, 중견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음

※ 2016년도 업무보고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담당 부서		담당자 및 연락처
미래부	기획재정담당관실	과장 손승현, 서기관 최문기(☎ 02-2110-2220, 2230)
	창조경제기획과	과장 권현준, 사무관 이종우(☎ 02-2110-2070, 2077)
문화부	창조행정담당관실	과장 이수명, 사무관 김동은(☎ 044-203-2211, 2212)
산업부	산업정책과	과장 문동민, 서기관 이창훈(☎ 044-203-4210, 4225)
복지부	보건산업정책과	과장 황승현, 사무관 송양수(☎ 044-202-2901, 2903)
방통위	창조기획담당관실	과장 최성호, 사무관 이광용(☎ 02-2110-1320, 1321)
금융위	금융정책과	과장 권대영, 사무관 전수환(☎ 02-2156-9710, 9717)
중기청	정책총괄과	과장 이준희, 사무관 양승욱(☎ 042-481-4537, 4541)